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공공영역과 행정

임의영*

고혁근**

박진효***

행정은 공공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은 행정이론과 행정적 실천의 핵심 주제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은 공공영역의 탐구에 학문적 역량을 집중한 한나 아렌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를 살피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아렌트의 공공영역에 대한 연구전개과정을 소개하고, 공공영역의 정치적, 실존적 의미를 살핀다. 그리고 행정이 공공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논의한다.

주제어: 공공성, 공공영역, 아렌트, 민주주의

I. 서론

행정은 본질적으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공공성은 정치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윤리적 차원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임

* 주저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철학이다(cylim@kangwon.ac.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윤리이다(hgko@kangwon.ac.kr)

*** 공동저자,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복지행정이다(pjhege@naver.com)

의영, 2003). 공공성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에 해당된다. 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의의 관념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결정내용이 정의의 관념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정의 관념은 분배적 평등이념에 의해 인도된다. 분배적 평등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매우 논쟁적이다. 그에 견주어 민주주의의 이론발달 과정을 보면, 다수결의 원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와 토론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영역(공론영역, 공론장, 시민사회)은 민주적 토론을 통해 논쟁적인 정의 관념들이 제시되고 검토되는 공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공영역은 공공성이 실현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 하겠다. 따라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행정은 공공영역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과정이나 행정민주화와 관련해서 심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를 다루는 경우나(문태현, 1992, 2010, 2011; 윤경준·안형기, 2004; 김희강, 2010; 정정화, 2011; 정무권, 2011), 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통치구조에 접목하고자 하는 거버넌스를 다루는 경우(이명석, 2002; 이명석·배제현·양세진, 2009; 우창빈, 2014; 최태현, 2014; 김정희, 2014)를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이 행정학적으로 반영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 분야에서 공공영역이 갖는 중요성에 견주어 볼 때, 공공영역의 본질적인 의미에 천착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은 공공영역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데 행정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의 본질적인 의미를 밝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필생의 연구력을 집중한 한나 아렌트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¹⁾

1) 행정학 분야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는 주로 위르겐 하버마스(J. Habermas)의 공론장 이론에 의존한다. 그는 역사적 고찰을 통해 부르주아 공론장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통이론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상적 담화상황을 공론장의 규범적 조건으로 제시한다(2001, 2006). 이상적 담화상황은 소통에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개인들이 오직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를 지향하는 소통상황을 말한다. 하버마스는 이성적인 사회적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공론장의 이상적 상황을 규범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공론장의 정치적 의미와 실존적 의미

이 글은 먼저 공공영역의 복원을 통해 진정한 정치를 실현하려는 아렌트의 이론적 기획을 그녀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II장). 그리고 그녀의 공공영역 개념이 갖는 정치적 의미(III장)와 실존적 의미(IV장)를 세밀하게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현대적 상황에서 공공영역을 복원하기 위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본다(V장).

II. 아렌트의 이론적 기획: ‘정치적인 것’의 복원

아렌트의 학문적 삶을 관통하는 이론적 기획은 ‘정치적인 것’의 본질을 밝히고 그것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를 모델로 하여, 시민공화주의 전통에 따라 다양하고 평등한 사람들이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공공영역을 복구하는 데 필생의 학문적 역량을 집중한다.

아렌트는 학문의 길에 들어설 때 철학에 관심을 가졌으나, 나치를 경험하면서 정치이론²⁾에 관심을 갖게 된다. 아렌트의 정치사상에 영향을 미친 실존적 조건은 ‘유대인’과 ‘무국적자’라는 두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유대인이었던 그녀는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조국을 떠나야 했고, 18년 동안 무국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아렌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 문제를 논의한다. 특히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나 아이히만에 대한 예루살렘의 재판을 비판적으로 보고한 부분은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아렌트는 무국적자로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정치학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권리를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라는 의미 있는 개념을 고민하게 된다

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까지 발전하지는 않는다. 아렌트는 공공영역의 정치적, 실존적 의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집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아렌트는 정치와 철학의 간극을 강조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치철학이라는 말보다는 정치이론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Young-Bruehl, 2007).

나치의 반유대인 정책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렌트는 시체를 산업적으로 생산하는 죽음의 수용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전체주의 연구에 천착하게 된다. 그녀는 히틀러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에서 등장한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연구를 집약하여 《전체주의의 기원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1951)》을 발표한다.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전례가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제로 이해한다. 과거의 독재정치나 전제정치는 ‘공포’를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전체주의체제에는 공포가 체계적으로 배태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전체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거대한 목표를 추구한다.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외부 세계의 변형이나 사회의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OT, 251).”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상들 대신에 한 부류의 위대한 인간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들을 마치 모든 인간이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직하고자 한다(OT, 218).” 이러한 의미에서 수용소는 공포의 실험장이자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이다. “전체주의 정권의 강제수용소나 집단학살 수용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전체주의의 기본 신앙이 실증될 수 있는 실험실 기능을 한다(OT, 218).” 아렌트는 이러한 전체주의를 플라톤 이래 서구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반정치적 편견(antipolitical prejudice)’의 병리적 표현으로 본다(Villa, 2009: 29).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설득과 토론의 가치에 대한 실망으로 플라톤은 초점을 정치에서 철학으로 이동시킨다. 지혜의 화신인 철인왕의 지배는 ‘정치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의 대체재로 등장한다. 이러한 대체의 과정에서 전체주의는 서구의 사상적 유전자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묵시론적인 예언을 남긴다. “전체주의의 해결책은 강한 유혹의 형태로 전체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생존할 것이다. 즉 인간다운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면 언제나 나타날 강한 유혹의 형태로 생존할 것이다(OT, 253).”

전체주의에 대한 연구 이후, 아렌트는 기념비적인 저서 《인간의 조건 *The Human Condition*(1958)》을 발표한다. 이 책은 아렌트 정치사상의 정수가 모두 담

겨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잊혀져버린 공공영역의 이념과 비도구적인 프락시스(행위 개념)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녀가 공공영역의 복구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전체주의의 위협, 사회경제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영역(social realm)’의 위협, 문명적으로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올 위협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류 전체주의의 등장 가능성, 약탈적 경제행위의 제도화, 국가 간 경쟁으로 인한 가공할 무기의 대량 생산체제는 ‘정치적인 것’의 복구를 통하지 않고는 견제될 수 없다는 시대적 절박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 책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정치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념들—가령 정치, 권력, 자유, 행위 등과 같은 개념들—을 ‘오래된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재전유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정치적인 것의 핵심을 자유에서 찾는다. 그녀가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내면적인 자유나 선택의 자유와 같은 사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행위와 말로 표현하는 공적 자유(public freedom)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자유가 실현되는 공공영역에서 권력이 작동한다. 《혁명론 *On Revolution*(1963)》에서는 이러한 공적 자유와 권력에 대한 논의가 집약되어 있다. 아렌트에게 혁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를 세우는 데 있다(OR, 95). 그녀는 근대혁명의 의의를 헌정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새로운 정치질서’의 창조를 통해 새로운 공공영역을 세운 것에서 찾는다. 이 책은 정치적인 것의 복원이라는 아렌트의 이론적 기획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라는 충격적인 개념을 제시한 《에루살렘의 아이히만 *Eichmann in Jerusalem*(1963)》을 둘러싼 세계적인 관심과 논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아렌트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공화국의 위기 *Crises of the Republic*(1972)》를 발표한다. 그녀는 소용돌이의 시대라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흑인 민권운동과 학생운동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시민권의 복원과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의 공공영역이 유지되고 활성화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투명성과 공적 관심,

그리고 공적 참여를 강조한다.

아렌트의 이론적 경로는 공공영역의 복원을 통해 진정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렇다면 그녀가 이론화한 공공영역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실존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공공영역에 부여한 실존적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의 두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Ⅲ. 정치영역으로서 공공영역

1. 기초범주: 인간의 활동유형

아렌트의 정치사상은 공간적 차원에서 인간은 지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시간적 차원에서 인간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제한된 시간만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한다. 유한한 공간적, 시간적 실존조건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에게는 근력, 이성,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은 인간의 신체적 활동과 사유 그리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능력들이다. 아렌트는 여기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정을 포함시킨다. “인간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즉시 자신의 실존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은 조건화되는 존재(conditioned beings)이다(HC, 9).” 이는 인간을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존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유한성이라는 실존조건에 상응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활동형태에 대한 범주화는 아렌트 정치이론의 기초를 이룬다.

아렌트는 인간의 실존조건에 대응하는 인간의 활동형태를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범주화한다. 이들은 아렌트의 정치이론을 끌어나가는 기본개념이다. 첫째,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 생명유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소모되는 재화—가령 물

이나 음식 같은 재화—의 획득활동은 동물적인 생존의 기본조건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조건에 대응하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으로 규정한다. 노동의 근본조건은 생명 그 자체이며(HC, 7), 그것의 결과물인 재화는 즉각적인 ‘소비’의 대상이다. 아렌트는 노동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동하는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 *animal laborans*’이라 부른다(HC, 84). “이 노동에서 인간신체는 그 능동성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팽개쳐져서 오직 자신의 살아있음에만 전념하며 자연과의 신진대사에 갈려서,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자신의 기능을 초월할 수도, 그 기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HC, 115).”

둘째, 인간은 자연이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오직 생명유지와 관련된 필수 재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과는 다른 인공적인 세계를 창출한다. 그러한 인공세계의 창출활동을 작업이라 한다. 인간은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물들을 제작한다. 그렇게 제작된 사물들 전체가 인공적인 세계를 구성한다(HC, 136). 이러한 세계성(worldliness)이 작업의 조건이며(HC, 7), 작업의 결과물인 재화—가구나 컴퓨터와 같은 재화—는 ‘사용’의 대상으로서 ‘지속성(내구성)’을 갖는다. 아렌트는 작업하는 인간을 ‘제작인 *homo faber*’이라 부른다. “오직 제작인만이 전지구의 군주이자 지배자처럼 행동한다. 그의 생산성은 창조주인 신의 이미지로 보이고, 그래서 신이 무에서 창조한다면 인간은 주어진 물질로 창조하는 까닭에 인간 생산성은 그 정의상 프로메테우스의 반란의 결과물이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한 자연을 파괴함으로써만이 인위적인 세계는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다(HC, 139).”

셋째,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양하다. 아렌트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조건을 다원성(plurality)이라 규정한다. 다원성은 사람들이 동등하며 동시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다원성의 조건에 상응하는 인간의 활동을 ‘행위’로 규정한다. “행위의 근본조건은 다원성으로서 인간조건, 즉 보편적 인간(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들(men)이 지구상에 살며 거주한다는 사실에 상응한다. 인간조건은 모든 측면들이 다소 정치에 관련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원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조건이다

(HC, 7.)”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활동형태로서 행위는 행동과 말을 모두 포함한다. 인간사는 ‘인간관계의 그물망(web of human relationships)’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말을 통한 인격의 현시와 행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은 항상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행위와 말의 직접적인 결과들이 감지되는 그물망으로 귀속된다(HC, 184).”

출생과 죽음, 탄생성과 사멸성(natality and mortality)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기본조건이며, 노동, 작업, 행위는 이러한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은 필수재를 생산함으로써 개인과 종의 생존을 보장한다. 작업은 인공세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한한 인간의 삶에 영속성과 지속성을 부여한다. 정치적 참여 행위는 기억함, 즉 역사의 조건을 창출함으로써 불멸성(immortality)을 부여한다(HC, 8).

2. 정치적인 것의 의미와 공공영역

인간의 활동형태 가운데 인간의 다원성이라는 조건에 상응하는 행위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는 마키아벨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적 행위로서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 혹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권력관계를 조건으로 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정치권의 기원을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찾는다. 토론과 설득을 본령으로 하는 폴리스에서 당대에 지혜의 화신이었던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다는 절망적인 경험은 복수의 인간들(men)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지혜의 화신인 철인왕 한 사람(Man)의 지배에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다시 말해서 철학이 정치를 주조하는 일종의 ‘정치의 철학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복수의 인간들에 의한 토론과 설득을 본령으로 하는 본래적인 정치 개념이 진리를 아는 한 사람의 지배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플라톤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영역을 진리를 탐구하는 아카데미아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철인왕의 지배는 근대에 이르러 정치를 주조하는 철학이 배제되고 오직 지배만이 정치를 의미하게 된다. 토론으로서의 정치가 지배로서의 정치로

변질됨으로써 오히려 ‘비정치성 혹은 정치적 무관심’이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PP, 174-175).

아렌트는 정치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 철학적 전환 이전의 폴리스에 주목한다. 폴리스에서는 사적 영역과 공공영역(public realm)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은 가부장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평등의 공간이고, 노예가 삶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을 전담하는 공간이다. 사적 영역에서 동물적 노동은 노예에게 전담되고, 가부장은 필수재의 생산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시민의 권리를 가지고 공공영역에 참여한다. 공공영역은 자유의 공간으로서 말과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성을 드러내는 ‘수다스러운 공간’이다(HC, 26). 공공영역은 바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공영역에서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에 기초한 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개성이 보장되고 계발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아렌트는 이러한 공적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정치의 본령으로 본다. 그녀에게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은 ‘공적인 것(the public)’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곧 정치영역이다.

아렌트는 ‘공적인 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하나는 ‘공개성’이다. 공적인 것은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HC, 50).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공공영역은 ‘드러남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통성’이다.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을 중심으로 사적인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을 구성한다(HC, 52).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공공영역은 ‘공통의 세계(common world)’라 할 수 있다. 공적인 것 혹은 정치적인 것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영역이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갖기 때문이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영역의 존재조건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건이 토론을 가능하게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할 수 있는 척도나 공통분모가 없다는 것이다(HC, 57).

공공영역에서는 공통의 척도가 없기 때문에, 아렌트는 인간의 판단능력에 주목한다. “정치영역에서 우리는 판단 없이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데, 정치적 사고

는 본질적으로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이다(PP, 140-141).” 그녀는 ‘판단’을 정치의 핵심기제로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판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PP, 142). 하나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특수한 것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우이다. 법에 따라 특수한 행위의 범법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판단이 갖는 한계는 보편적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판단, 즉 메타판단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공공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라 하겠다. 공공영역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제시하는 기준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렌트는 보편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의 기초로서 칸트가 제시한 ‘정신의 확장(enlargement of mind)’ 개념에 주목한다. 정신의 확장은 “정신이 모든 각도에서 대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미시적인 데에서 모든 가능한 관점들을 차례로 획득할 수 있는 일반적 시각을 갖는 데까지 확장시켜, 상상 가능한 모든 관점들을 채택하고 각자의 관찰들을 모든 다른 사람들의 관찰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Kant, 1772: 73; KPP, 92-93에서 재인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의 확장은 개인이 갖는 주관적 제약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정신의 확장은 고립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상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현존을 전제하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공공영역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의 확장을 통해 불편부당한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3. 정치체제로서 이소노미와 권력

공공영역으로서 폴리스는 어떠한 정치체제인가? 상식적으로 폴리스는 민주정의 전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당대의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과 마찬가지로 지배자의 수에 따라 분류된 지배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즉 다수민중(demos)이 지배(kratos)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민주정에도 수단적 정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아렌트는 폴리스 정치체제를 ‘이소노미(isonomy)’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소노미는 평등을 의미하는 iso와 법과 규범을 의미하는 nomos가 결합된 용어이다. 사전적으로 그것은 법 앞의 평등 혹은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아렌트는 아테네의 폴리스 정치체제의 맥락에서 이소노미를 법 앞의 평등보다는 법적 활동을 동등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혹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한다(PP, 159-160). 이소노미체제는 인간이 본래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평등하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제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폴리스의 이소노미는 폴리스의 속성이었지 사람들의 속성은 아니었다(OR, 98).” 이소노미는 권력과 지배, 혹은 법과 명령을 동일시하는 근대 정치체제와는 성격이 다르다(CR, 189). 게다가 민주정은 오히려 이소노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다(OR, 97).

그렇다면 이소노미에서 정치의 핵심 개념인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이 생성되는 메커니즘과 기능은 무엇인가? 첫째로, 아렌트의 권력 개념이 갖는 특징은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권력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집단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력은 어떤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능력으로 본다(Weber, 1947: 152). 이러한 권력관계에서는 인간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인간을 목적적 존재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도덕법칙에 위배된다. 아렌트는 인간의 도구화를 가져오는 통상적인 권력개념을 가짜 권력, 즉 폭력으로 규정한다.³⁾ 그리고 진정한 권력은 인간을 목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아렌트에 따르면, 목적적 권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권력을 집단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렌트의 권력은 공동적 권력(communal power)이라 할 수 있다(장명학, 2002).

3) 아렌트는 나치의 전체주의체제에서 자행된 권력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것을 근본악(radical evil)으로 규정한다(2006: 251).

“권력은 단순히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행위하는(to act in concert) 능력에 상응한다. 권력은 결코 개인의 속성이 아니다. 그것은 집단에 속하며, 그 집단이 함께 있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권력이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행위하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CR, 193).” 아렌트가 생각하는 권력현상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의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하겠다(Habermas, 1977: 4).

둘째로, 권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이다(HC, 201). 함께 살기 때문에 행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만 사람들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들이 소통할 때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소통의 정도에 따라 권력의 강도는 달라진다. 만일 소통이 없다면, 권력은 사라지게 된다. 권력은 사람들이 함께 살며, 소통할 때 발생한다. 더 붙여 다음과 같은 소통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곳에서,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동이 야만적이지 않은 곳에서, 말이 의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곳에서, 그리고 행동이 관계와 현실을 폭력적으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에서만 권력은 실현된다(HC, 200).”

‘함께하는 삶’을 지향하는 신뢰성, 진정성, 그리고 건설적 창조성은 아렌트가 제시하는 소통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셋째, 아렌트에 의하면,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이다(BPF, 199). 따라서 권력의 존재이유 역시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의 기능은 자유의 보호와 신장이라 하겠다. 이를 세분해서 보면 권력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말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기능, 정치적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기능, 그리고 혁명적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자유의 질서를 세우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정리될 수 있다(Habermas, 1977: 6-7). 종합하면, 권력은 공공영역을 보호함으로써 자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아렌트에 의하면, 권력과 폭력은 길항관계에 있다(CR, 207). 다시 말해서 권력이 강해지면 폭력이 약해지고, 권력이 약해지면 폭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경고한다. “모든 권력의 감소가 폭력에 대한 공개적인 초대라는 것을 … 알아야만 한다(CR, 242).”

4. 공공영역의 기능

그렇다면 공공영역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첫째로 공공영역은 공동의 결정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이소노미로서 공공영역에서는 시민 누구에게나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된다. 그리고 강제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말과 설득’만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HC, 26). 따라서 참여자들에게는 ‘확장된 정신’을 발휘하여 결정을 위한 보편적인 판단기준을 찾는 노력이 중요한 미덕으로 요청된다. 보편적인 정신이나 폴리스 전체의 이익을 벗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공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개인적인 이익에 기초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이 전체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것을 논증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영역은 개인(특수성)의 집단(보편성)에 대한 원심력을 견제하고, 집단의 개인에 대한 구심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공공영역은 불멸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공공영역은 참여자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개성, 타인을 능가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탁월성, 혹은 자신의 능력이 최고임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다(HC, 41, 48-49).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불멸의 명예’를 획득할 수 있다. 이를 거꾸로 보면, 공공영역은 영웅적인 말과 행위를 반복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명예로운 말과 행위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조직화된 기억체’로서 기능한다(HC, 198). “사멸적 인간들 그리고 그들의 흘러가는 행위와 말에 항구적인 안식처가 될 도

시가 폴리스이다(PP, 165).”

이처럼 공공영역은 말과 행위를 통해 집단의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사적 공간(associational space)’이라 할 수 있으며,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개개인이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경쟁한다는 점에서 ‘드러냄의 공간’인 동시에 ‘경합의 공간(agonistic space)’이라 할 수 있다(Benbabib, 1992).

IV. 실존공간으로서 공공영역

아렌트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실존주의자인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와 칼 야스퍼스(Karl Jaspers)에게 사사를 받았다. 아렌트의 사고에는 실존주의적인 분위기가 깊게 배어있다. 이 장에서는 공공영역에 내재된 실존적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1. 정치적 실존

실존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제는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실존적 의미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본성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은 주어진 존재조건 속에서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존적 의미를 획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아렌트 역시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없고,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인간을 ‘조건화되는 존재’로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접촉한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삶의 조건에 대한 반응이 노동, 작업, 행위로 나타나는 데, 이 가운데 아렌트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물질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노동이나 작업은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획득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실존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만이 획득 가능하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

위는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획득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래서 아렌트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과 행위를 통해 의미를 교환하는 공공영역의 복원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녀에게 공공영역은 인간이 실존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따라서 아렌트의 경우에 실존은 공적 실존 혹은 정치적 실존을 의미한다.

2. 탄생성과 행위 그리고 자유

실존주의는 인간의 유한성에 주목한다. 특히 죽음은 실존주의자들이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숙제이다. 아렌트의 연인이자 스승이었던 하이데거는 역설적으로 죽음, 즉 사멸성에서 실존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에게 죽음은 ‘무(nothingness)’를 의미한다. 무는 말 그대로 실존의 종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올 미래이다. 그 미래는 확실하다. 그러나 죽음의 확실성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언제 죽게 될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은 확실성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향해가는 여정이라 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게 되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만들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본래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이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존재이유나 근거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 만일 이러한 존재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곧 무 혹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 속에 던져진 인간은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성을 실현한다.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한 존재이유의 정초는 바로 인간적 자유의 토대가 된다. 이처럼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죽음, 즉 사멸성에 기초한다(정기철, 2007; 박서현, 2011).

이에 반해서 아렌트는 인간의 실존, 특히 정치적 실존의 근거를 죽음이 아닌 탄생성에서 찾는다(Young-Bruehl, 2007: 160-161). 그녀는 특히 행위가 탄생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출생에 내재하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 오는 자가 어떤 것을 새로이 시작할 능력 즉 행위의 능력을 가질 때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창발성의 의미에서 행위의 요소, 즉 탄생성의 요소는 모든 인간 활동에 내재한다. 더욱이 행위는 우월한 정치적 활동이기 때문에, 사멸성이 아닌 탄생성이 형이상학적 사상과 구별되는 정치적 사상의 핵심범주가 되는 것이다(HC, 9).”

아렌트는 행위개념의 어원을 통해 그것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탄생성’개념에 의존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녀에 따르면,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는 ‘행위하다(to act)’를 지칭하는 동사가 각각 두 개씩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어 동사는 ‘시작하다’ ‘지도하다’ 그리고 나중에 ‘지배하다’의 의미까지 갖게 된 *archein*과 ‘이루다’ ‘달성하다’ ‘완성하다’를 의미하는 *prattein*이다. 라틴어 동사는 ‘움직이게 하다’ ‘지도하다’를 의미하는 *agere*와 ‘낳다’를 의미하는 *gerere*이다.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보면, 행위는 ‘시작’과 ‘완성/성취’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행위의 완성/성취를 지시하던 단어(*prattein*과 *gerere*)가 행위 일반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 반면에 시작을 지시하던 단어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archein*은 ‘지배하다’와 ‘지도하다’를 의미하게 되었고, *agere*는 ‘움직이게 하다’보다는 ‘지도하다’를 의미하게 되었다(HC, 177, 189; BPF, 226).

여기에서 아렌트는 행위의 잊혀진 의미인 ‘시작’에 주목한다. 그녀에게 시작은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탄생에 내재된 속성이다. 이러한 발견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 처음에(*initium*)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HC, 177).” 이 표현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initium*은 태초의 창조를 의미하는 절대적 시작이 아니라 인간의 탄생을 의미하는 ‘상대적 시작’을 말한다(홍원표, 2013: 52-53). 그런 의미에서 이 문장을 재해석하면, 어떤 시작이 있고, 어떤 개인이 탄생하였는데, 그 사람 이전에는 그와 똑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탄생을 통해 수많은 개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자이며 시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고유한 존재라는 것이다. 시작은 아렌트가 행위의 조건으로 삼았던 인간의 다원성을 가능하게 한다. 상대적 시작을 의미하는 *initium*은 주도권을 의미하는 영어의 *initiative*의 어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은

시작하는 자로서 주도권을 쥐고 행위하게 된다(HC, 177).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자유롭다.

시작과 관련된 자유는 내면적인 자유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는 것, 즉 공적인 자유이다. “자유는 사유의 속성이나 의지의 특질이 되기 이전에 자유인의 지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지위는 그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집을 떠나고, 세계 속에 들어와 말과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했다(BPF, 203).” 생물학적 탄생에 내재된 시작의 속성은 공공영역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제 2의 탄생 혹은 정치적 탄생으로 승화된다. 자유는 공공영역을 전제로 한다. 아렌트는 “행위가 자유롭게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동기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한 결과인 의도된 목표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한다(BPF, 207)”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목표는 지성에 의해 설정되고, 목표가 설정되면 의지가 발동하여 행위를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목표는 행위의 자유로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의지 역시 자유를 견인하는 속성이 아니라 행위의 강함과 약함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행위에 앞서는 지성과 달리, 그리고 행위를 유발하는 의지의 명령과 달리, 행위를 고무하는 원칙은 행위 자체의 수행에서만 온전히 명시화된다(BPF, 208).” 그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 ‘수행의 탁월성’이다. 그것은공연예술에서 배우가 탁월한 연기력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자유는 연기의 목표나 연기자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연기 그 자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말과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바로 자유의 순간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공공영역에서 행위하는 동안만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자유는 정치의 존재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자유가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자유이며, 그것이 경험되는 장은 행위이다(BPF, 199).”

3. 용서와 약속

행위는 그 시작이 분명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노동이나 제작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노동은 생명과정의 순환에 갈켜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제

작은 사람의 머리 안에 이미지를 현실화할 때 완성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HC, 143-144). 이러한 행위의 특성에서 그것이 갖는 한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는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또한 한 번 표출된 말과 행위는 다시 주위 담을 수도 없다. 이처럼 행위는 ‘예측불가능성’과 ‘환원불가능성’이라는 공적 실존 혹은 정치적 실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렌트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와 ‘약속’을 말한다.

“자신이 무엇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고, 알 수 있다 할지라도 행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무능력인 환원불가능성의 근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용서의 능력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인 예측불가능성의 치유책은 약속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는 인간의 능력에 내재해 있다(HC, 237).”

용서는 행위의 결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만약 용서가 없다면, 행위의 환원불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묶여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아렌트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비의도적 혹은 무의지적 죄악에 대한 용서가 없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인간이 행한 것으로부터 서로를 해방시켜줌으로써만 인간은 자유로운 주체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변화시켜 다시 시작하겠다는 부단한 의지를 통해서만 인간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부여받을 수 있다(HC, 240).”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통의 복잡성으로서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와 반응들이 결합되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약속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리고 약속이야말로 공공영역의 존립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함께 하도록 만드는 힘은 ...

상호약속 혹은 계약의 힘이다(HC, 244-245).”

용서와 약속은 행위의 환원불가능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극복하여 인간의 행위 능력을 무한히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 시작으로서의 행위능력이 지속하는 한 인간의 실존적 의미는 지속된다. 인간의 실존적 의미는 조금씩 죽어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 이 땅에 처음 등장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반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인간사의 영역인 세계를 그것의 정상적이고 ‘자연적’ 황폐화로부터 구원하는 기적은 궁극적으로는 다름 아닌 탄생성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능력은 존재론적으로 탄생성에 근거한다(HC, 247).”

V. 현대적 공공영역의 복원과 행정의 역할

아렌트에 의하면, 공공영역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론적 명령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다. 공공영역은 말과 행위를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인정과 존중의 공간, 말과 행위의 표현절차에 대한 약속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신뢰의 공간, 사람들의 과실에 대한 용서를 통해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는 관용과 화해의 공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웃사랑을 통해 집단적 결속을 다지고 크게는 세계에 대한 사랑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공영역에 대한 생각은 유토피아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녀가 생각하는 공공영역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장에서는 현대의 상황을 살피고, 현대사회에서 공공영역을 복원하는 데 주요한 행위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가 행정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1. 현대의 상황: 사회영역에 의한 공공영역의 정복과 삶의 영역의 재편

아렌트가 복원하고자 했던 공공영역은 소통의 공간으로서 정치영역이며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는 인간적 실존의 공간이다. 공공영역의 복원 기획은 근대에 공

공영역을 정복한 사회영역의 등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⁴⁾ 사회영역은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전담하던 경제활동이 공적 공간으로 이전되면서 형성된다. 사적 영역은 내밀한 사생활과 친밀성의 영역으로 축소된다. 사회영역은 생존이 삶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이라는 경제적 강제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이다 (HC, 46)” 경제적 강제에 순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사회영역은 경제적 강제를 통해 순응적 인간을 양산한다. 결과적으로 공공영역의 존립근거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다원성이 파괴된다. 사회영역의 존립근거는 인간의 평준화와 동질화이며, 지배 이데올로기는 순응주의이다. 헤겔(G.W.F. Hegel)의 표현을 빌면, 평준화되고 동질화된 인간은 ‘욕구의 총체이며 변덕과 자연적 필연성의 혼합체로서 구체적인 개인(1953: 122)’이다. 사회영역은 그러한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하는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의 주도권은 정치학에서 경제학으로 이동하고, 인간행동을 인과적으로 연구하는 행태과학이 발달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세우는 기술이 아니라 조작과 통제의 기술을 제공한다. 흥미롭게도 아렌트는 행태과학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행태과학의 원리가 적용가능하게 동질화된 사회에 대해 우려한다. 동질화된 사회는 아렌트가 인간의 정치적 실존의 전제로 삼았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렌트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영역은 인간이 새로운 시작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박탈한다.

사회영역에 의한 공공영역의 정복은 공공영역의 완전한 폐지를 의미한다. 소통의 정치는 지배의 정치에 의해 대체된다. 정치영역으로서 공공영역은 시민이

4)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하는 사회영역이 공공영역을 지배하는 근대적 현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연구를 참조할만하다. 그에 따르면, 본래 시장은 사회제도에 내포되어 있었는데, 자본주의경제체제가 발전하면서 관계가 역전하여 오히려 시장경제가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이 제어되지 않으면, 인간성과 자연의 파괴는 더욱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Polanyi, 2009; 임의영, 2014).

아닌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재편된다.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정치영역은 그 존립근거를 사회영역에서 찾게 된다. 근대의 민족국가는 사회영역을 법적, 정치적으로 승인하고 보호하는 데서 존재이유를 찾는다. 그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적 장치로서 관료제가 고도로 발달한다. 관료제의 효율성과 역량이 강화될수록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은 축소되고, 관료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정치를 압도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사적 영역과 공공영역이 분리된 고대적 삶의 조건과는 다르게, 생활과 친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영역, 생존과 경제적 이익추구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영역, 지배와 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정치영역으로 분화된다. 정치영역은 근대적인 통치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시민의 의지를 수렴하고 표출하는 정치영역과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정치영역에서 수렴된 의지를 실행하는 행정영역으로 분화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사회영역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행정국가라는 표현이 일상화될 정도로 행정영역 역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공공영역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다.

2. 공공영역과 공공성 그리고 행정

일반적으로 공공성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와 결과로서의 정의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서 실현된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달된 결과라 하더라도 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결정의 내용이 아무리 정의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공공성이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공공성은 민주주의원리가 정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고, 거꾸로 정의 원칙이 민주주의원리에 의해 제한되는 변증법적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임의영, 2003). 이러한 공공성의 의미에서 보면, 공공영역은 민주적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공공영역의 복원은 공공성 실현의 한 축을 세우는 시도라 하겠다. 사회구성원들의 참여와 이소노미적 소통구조를 활성화하는 공공영역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합산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사회영역에 의한 공공영역의 정복으로 아렌트적 의미의 진정한 정치가 사라지고, 지배로서의 정치가 공공영역을 대신하게 되고, 지배로서의 정치도 정부관료제에 의한 행정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정부는 사회영역을 보호하는 데서 정당성을 얻고자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영역에 대해 도구적인 기능만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영역과 행정영역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하겠다. 다시 말해서 행정은 사회영역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행정은 사라진 공공영역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에서건 부정적 의미에서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⁵⁾

공공영역의 복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법, 제도, 정책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심각하게 위축될 수도 있으며,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현대국가에서 법, 제도,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을 중심으로 공공영역의 복원을 위한 시도 가능한 방안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사회영역은 현대의 삶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그 영역을

5)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문제는 국가가 경제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영역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데,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도구주의적 관점이다. 마르크스주의나 자유주의나 공히 사회영역을 독립변수로, 국가를 종속변수로 보는 도구주의적 관점을 공유한다.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후자는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활동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사회영역을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둘째는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사회영역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배계급 내에서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의 지점이 국가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상대적 자율성의 관점은 전략관계적 관점으로 진화한다. 국가는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전략적으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해 경합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안정되게 하나의 세력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항상적으로 헤게모니의 주도세력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를 단순히 지배계급의 도구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Jessop, 2000).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은 사회영역에 완전히 포획된 것도 아니며, 사회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행정은 자율과 포획의 긴장상태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사회영역의 존재를 전제로 공공영역의 복원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회영역을 경제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영역(economic sphere)’과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영역(public discourse sphere)’으로 재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공론영역이 사회영역의 경제적 강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론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들과 관련된 것이다.

1) 자율적 공론영역의 형성 조건

첫째, 자율적 공론영역이 형성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사람들이 생존을 볼 모로 하는 경제적 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저선은 쉐(A. Sen)의 ‘인간의 안전보장’ 개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 안전망, 기초교육, 건강보장 등으로 구성된다(2008: 168-170). 인간의 안전보장은 선별적 복지논리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논리에 따라 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복지가 지향하는 지점을 루소(J. Rousseau)가 제시한 이상적 기준에서 보면, ‘그 어떤 시민도 다른 사람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풍족해도 안 되고, 또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도 안(1999: 69)’ 되는 선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아렌트가 기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시작의 희망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둘째, 자율적 공론영역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은 (시장)경제영역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회영역을 경제영역과 공론영역으로 재편하는 것이 고대의 공공영역을 현대적으로 복원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영역을 두 개의 영역으로 재편한다고 해서 영역들 간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영역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역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원리가 작동하게 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영역의 독자성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다. 그것은 주로 경제영역이 다른 영역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제영역의 가장 지배적인 활동주체는 기업이다. 그에 상응하는 노동조직이 있으나 실질적인 지배력에 있어서는 엄청난 격차를 보인다. 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치영역의 정치력을 구매하고, 공론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의 여론조성능력이나 지식인들의 비판력을 구매한다. 공론영역이 경제영역에 의해 구매되면, 공론영역에서 아렌트가 중시했던 ‘확장된 정신’을 통해 불편부당한 입장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공론영역이 경제영역에 의해 구매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왈저(M. Walzer, 1983)의 복합평등론은 의미 있는 영감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들은 그 의미에 맞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하는 자율적인 정의의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의의 이념을 훼손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치권력은 정의 영역 간의 경계를 지킴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영역에 의한 공론영역의 지배를 막는 것은 정부의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정치영역이 그러한 기능을 해주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영역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행정영역 역시 경제영역에 의해 구매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목격되는 바이기도 하다. 이는 공론영역에서 시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 견제될 수 있다(임의영, 2011: 222-225).

2) 공론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

첫째, 공론영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범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대의 이소노미가 상징하는 평등의 규범이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공론영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동등하게 말할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빈부나 유무식이 발언권의 차등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공론영역에서의 토론규칙에 구조의 편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칙 자체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은 규칙을 지속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⁶⁾ 장기적으로는 공론영역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 학습될 수 있도록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이 제도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대사회에서는 공론영역에 참여하는 주체단위들이 다양화되고 있다. 고대의 공공영역은 가부장으로서의 시민 개개인을 주체로 가정한다. 고대적 사고에 의하면, 개인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만이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주체단위의 다양성을 전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은 물론이고 다양한 결사체들이 주체로서 공론영역에 참여한다. 따라서 행정이 취해야 하는 주요한 조치는 사회의 결사체들에게 자신들의 이익, 의견, 관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⁷⁾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다양화된 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하겠다.

셋째, 공론영역은 정보와 의견들이 소통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론영역에서 보다 의미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를 의미하는 영어의 state는 통계를 의미하는 statistics와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은 정보를 통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⁸⁾ 공론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행

6)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할 것, 마구잡이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 예의를 지킬 것 등등과 같이 정상적인 혹은 상식적인 토론에 대한 사회적 관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압목적 규칙은 그 내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차칫 의사표현의 방식이 단지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Young, 2000).

7) 공론영역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이 참여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집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8) 국가는 국민과 자원을 통계적으로 범주화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인다(Scott, 2010). 이를 통해 국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마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재정과 전쟁을 위한 자원동원의 맥락에서 통계적 관리가 대두되었을 것이다. 동원을 추구하는 국가의 패러다임

정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행정활동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공론영역에서 소통되는 정보들이 토론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말과 행위는 의미전달을 위한 고대의 전형적인 미디어이다. 말과 행위가 갖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성 때문에 공공영역은 아고라와 같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있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2002)의 지적처럼, 미디어가 의미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미디어의 다양화는 거대한 흐름이고, 그것을 거스르는 공론영역의 개념은 비현실적이다. 미디어의 다양화로 인해서 공론영역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공론영역들은 고유한 특성을 갖는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는 다양한 공론영역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각의 공론영역이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⁹⁾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서 언론은 공론영역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대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극장 공연이 일종의 언론의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상이 표출되고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Woodruff, 2010). 현대의 언론은 단순히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멈추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¹⁰⁾ 따라

은 정보처리능력이 불안정한 국민에게 국가가 가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적, 공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9)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공간이 등장하였고, 스마트기기의 발달로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사회관계망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 자유로운 토론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환기될 수 있는 감시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상업적 개입, 정부의 규제나 정치적 동원, 관계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부패에 의해 이러한 공간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10)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언론사는 기업이라는 한계 때문에 객관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업으로서 언론사는 광고주의 이해관계나 언론사의 활동에 제도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정부의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사

서 행정이 취해야 할 조치는 언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언론의 다양성은 ‘정신의 확장’을 위한 조건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언론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비교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편부당한 입장에 접근할 수 있다.

VI. 결론

아렌트의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성찰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아렌트의 공공영역은 소통으로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동시에 인간의 실존적 공간이다. 따라서 아렌트의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글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많은 영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실존공간으로서 공공영역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공공영역의 본질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학 분야에서 아렌트에 대한 연구는 지속될 가치가 있다.

둘째, 아렌트의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에서 다양한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배행위로서 정치개념에 대립하는 소통행위로서 정치개념, 환경결정론적인 행태개념에 대립하는 자발적인 행위개념, 개인적 실존개념에 대립하는 공적 혹은 정치적 실존개념, 죽음에 기초한 실존개념에 대립하는 탄생에 기초한 실존개념, 소극적 자유에 대립하는 적극적 자유개념, 수단적 권력개념에 대립하는 목적적 권력개념 등은 행정학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행정학분야에서 공공영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영역에 대

의 딜레마를 언론사 스스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경향으로서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언론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통언론사들과 새로운 형태의 언론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자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필요하다.

한 논의가 다양하게 소개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은 물론이고, 정의론으로 익숙한 존 롤스(John Rawls, 1993)의 공적 이성 개념, 다원주의적 정의론을 제시한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 1987; 1988)의 사회비평적 공공영역, 샹탈 무페(Chantal Mouffe, 2005)의 헤게모니 투쟁이 이루어지는 경합의 공간으로서 공공영역, 아리스 영(Iris Young, 1990)의 사회집단 개념에 기초한 차이의 정치가 수행되는 공공영역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론적 토양은 비옥한 편이다. 행정학분야에서 공공영역에 대한 이론적 지평을 넓히는 데 이러한 자원들이 충분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 BPF: Arendt, H. 2005. 《과거와 미래사이: 정치사상에 관한 여덟 가지 철학연습》, 서울: 푸른숲.
- CR: Arendt, H. 2011. 《공화국의 위기》, 김선욱 역, 파주: 한길사.
- EJ: Arendt, H.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김선욱 역, 파주: 한길사.
- HC: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96.
- KPP: Arendt, H. 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역, 서울: 푸른숲.
- OR: Arendt, H. 2004. 《혁명론》, 홍원표 역, 파주: 한길사.
- OT: Arendt, H. 2006. 《전체주의의 기원 1, 2》, 이진우·박미애 역, 파주: 한길사.
- PP: Arendt, H. 2007. 《정치의 약속》, 김선욱 역, 서울: 푸른숲.

2. 2차 자료

- 김정희. 2014.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지방정부 연구》 18(1): 267-290.
- 김희강. 2010. “공공성, 사회집단, 심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44(2): 5-27.
- 문태현. 1992. “정책분석과 비판이론: Habermas의 의사소통능력이론을 중심으로” 《한국

- 행정학보》 26(2): 265-280.
- 문태현. 2010.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의 논리와 한계.” 《한국행정논집》 22(3): 629-650.
- 문태현. 2011. “심의민주주의적 정책결정을 위한 제도화 방향.” 《한국행정논집》 23(1): 45-66.
- 박서현. 2011.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미.” 《철학》 109: 177-201.
- 우창빈. 2014.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기술적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가?” 《행정논총》 52(1): 219-246.
- 윤정준·안형기. 2004. “심의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효과성: 지방의제 21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2): 149-165.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9.
- 이명석·배재현·양세진. 2009.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사회적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145-172.
- 임의영. 2003.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의 조건.” 《정부학연구》 9(1): 23-50.
- 임의영. 2014. “Karl Polanyi의 내포개념과 공공성.” 《한국행정연구》 23(3): 1-29.
- 임의영. 2011. 《형평과 정의》. 과주: 한울.
- 장명학. 2002. “한나 아렌트의 공동권력과 정치.” 《한국정치연구》, 11(2): 43-68.
- 정기철. 2007.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47: 205-225.
- 정무권. 2011. “행정민주주의와 공공성: 심의민주주의와의 접목.” 《사회과학연구》 (강원대사회과학연구소) 50(2): 33-80.
- 정정화. 2011. “공공갈등과 합의형성: 심의민주주의 방식의 적용과 한계.” 《한국행정논집》 23(2): 577-606.
- 최태현. 2014. “자기조직적 거버넌스의 재고찰: 설계와 창발 개념의 통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2(2): 68-91.
- 홍원표. 2013.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 행위, 전통, 인물》. 고양: 인간사랑.
- Benbabib, S. 1992. “Models of Public Space: Hannah Arendt, the Liberal Tradition, and Jürgen Habermas.” C. Calhoun(ed.), *Habermas and the Public Sphere*, 73-98. Cambridge, Massachusetts / London, England: The MIT Press.
- Habermas, J. 1977. “Hannah Arendt's Communications Concept of Power.” *Social Research* 44(1): 3-24.
- Habermas, J.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한승완

역, 서울: 나남.

Habermas, J. 2006. 《의사소통행위이론 I II》, 장춘익 역, 파주: 나남.

Hegel, G.W.F. 1953. *Hegel's Philosophy of Right*. trans. by T.M. Knox. Oxford: The Clarendon Press.

Jessop, B. 2000. 《전략관계적 국가이론: 국가의 제자리 찾기》, 유범상·김문귀 역, 서울: 한울.

Mcluhan, M. 2002. 《미디어의 이해》, 김성기·이한우 역, 서울: 민음사.

Mouffe, C. 2005. *On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Rousseau, J.J. 1999. 《사회계약론》, 이환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Scott, J.C. 2010.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역, 서울: 에코리브르.

Sen, A. 2008.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원용찬 역, 서울: 갈라파고스.

Villa, D. 2009. "Hannah Arendt, 1906-1975." *The Review of Politics* 71(1): 20-36.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Walzer, M. 1987. *Interpretation and Social Critic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Walzer, M. 1988. *The Company of Critics*. New York: Basic Books.

Weber, M. 1947. *The Theory of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Becminster Press.

Woodruff, Paul. 2010. *The Necessity of Theater: The Art of Watching and Being Watched*.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Young, I.M.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Young, I.M. 2000. *Inclusion and Democracy*.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oung-Bruhl, E. 2007. 《한나 아렌트 전기》, 홍원표 역, 고양: 인간사랑.